

문재인은 이재용의 구속을 바랐을까?

관련 기사 3면



사진: 사진공동체재단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2면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기울다

3면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트럼프 이후,
악몽의 끝?

4면

바이든의
취임과
대북제재

5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살펴보는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6~7면

2011~12년
아랍의 봄에서
최근 중동 반란까지

8~9면

알렉스 캘리니코프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11면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12~14면

‘위안부 배상 판결’ 외면하는 문재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는 불가능한가?

김승주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발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을 압박했다.

법원은 2년 전 강제동원(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 강제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은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 있고 위안부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명시했던 기만적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이를 뒤 수요집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라며 문재인을 비판했다. 이 비판대로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규탄하고 항의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무책임하게 이 쟁점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게도 정부 비판에 나서라고 촉구해야 한다.

되돌릴 수 없는 국가 간 합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만 해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문재인 대통령)라거나 “합의 파기를 포함한 모든 게 가능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고 했었다.

우파들은 이런 입장 발표만으로 대책 없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호들갑스럽게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집권 1년 차에 약속을 뒤집어 “일본 정부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말이다.

우파들은 이제 대통령 문재인이 합의 유지 입장에 공개적으로 켜기를 박자 기세등등하게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관계를 되돌려 놓으라며 큰소리치고 있다.

앞서 봤듯이,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합의의 일방적 백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

현실에서 국가 간 조약 파기, 국제법 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강대국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법을 밥 먹듯이 무시하고 국가 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기 일쑤다.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평화 약속을 금세 깨뜨리곤 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 동참하는 식으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폐기할 것처럼 굴기도 했다.

국제법상 정식 조약도 파기할 수 있는데, 하물며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를 구두로 발표한 것에 불과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왜 파기할 수 없겠는가.

따라서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합의 폐기를 선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공약으로 걸어 놓고도, 정작 집권한 뒤에는 약속과 염원을 무시하고 한일 관계를 우선하는 **선택**을 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동맹 강화를 원하는 미국의 새 정부(바이든 대통령)를 의식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한일 경제 갈등은 기업들도 불편해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일 위안부 합의 굴욕이다, 파기하라” 규탄하더니 막상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공식 합의라 인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반식민주의? 페미니즘? —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편, 진보 진영 안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나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이 비현실적인 요구이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사회진보연대가 그렇다.

사회진보연대는 사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했었다. 정부 · 여당과 윤미향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위안부 운동에 관한 비판을 모두 친일 우파 취급하는 것(진영논리)도 올바르게 비판했다. 그런데 사회진보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약속 위반)을 꼬집는 데서 더 나아가 애초에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약속한 것부터 문제였다고 본다. 일본 정부를 물러서게 할 도리가 현실적으로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대중적 인기를 모으려고 포퓰리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반일 민족주의적** 약속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포퓰리즘을 대중인기영합주의에 가까운 의미로 쓴다.)

“할머니들이 살아있을 때 일본 국가가 전쟁범죄를 시인하고 사죄 · 배상을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 결국 위안부 문제를 여당의 지지 기반인 반일 민족주의로 묶어 두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아닐까.”(2020년 6월 11일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가 쓴 <매일노동뉴스> 칼럼)

사회진보연대는 일본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없다는 비판적 전제에 바탕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정도면 언어낼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2015년 한일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총리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운동의 쟁점”, 이유미,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 가을호>)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비판했지만, 잘못된 전제에 바탕해 정부 비

판을 하다 보니, 결국 문재인과 유사한 입장이 되고 만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분석이 갖는 난점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에서 비롯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위안부 문제의 현재적 과제를 일본 국가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에서 찾는다.

그리고 일본 국가의 제국주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부당하게 반일민족주의적 포퓰리즘과 등치시킨다.

“일본의 사죄 · 보상의 법적 형식에 집착하면서 현재적 과제가 상대화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성폭력을 야기하는 구조를 성찰하기보다 일본이 법적 배상을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민족피해를 부각하는 운동방식이 반일감정을 부추겨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하고 있다.]”(이유미, 같은 글)

법적 배상

그러나 법적 배상 문제는 단지 일본 정부로부터 금전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것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물론 금전적 보상이 중요치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피해자 1인당 위로금과 이번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금액이 같음에도 위안합의를 거부했던 할머니들이 배상판결은 크게 환영한 것을 보면, 돈 문제는 진정한 쟁점이아님을 알 수 있다. 법적 배상은 일본 국가가 제국주의 전쟁범죄의 **주체**였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공식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측의 위로금 지급이나 사과 표현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우파들은 일본 고위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사죄하고 돈도 줬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따진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껏해야 위안부 문제를 일부 군부대의 일

탈 행위와 그에 대한 군의 “관여”로 보는 데 그쳤다. 2015년 한일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우파 정치인들은 뒤돌아서서 또다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등 막말을 해대고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이런 일본 정부에게 한국 정부도 도전한 적이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력 ·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어쨌거나 한국 자본주의도 이 관계에서 득을 봐 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의 타협 · 밀월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반일 제스처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이득을 얻으려 했다.

사정이 이러니,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어서라도 법적 배상을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위안부 문제에서 민족 문제를 거세하고 성폭력 구조 문제로 조명하는 관점도 문제다.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가 바로 이런 논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질을 흐려서 일본 국가에 면죄부를 주는 대표 인물이다.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의 문제라면서 “반일 민족주의적 피해의식”을 벗어 던지라고 주장한다.

물론 반일 민족주의적 관점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접근법은 오늘날의 한미일 관계를 잘못 이해해 한국 정부(주로 민주당 정부)에게는 부적절하게 면죄부를 주고, 반제국주의적 국제연대의 가능성은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난점은 페미니즘으로 극복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를 ‘여성이 당한 끔찍한 성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언뜻 보면 민족을 뛰어넘는 인류 보편적 연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그렇기는커녕 일본의 제국주의 범죄의 심각성을 못 보게 해 오히려 반제국주의적 국제연대가 자라는 데 방해가 된다. 특히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운동은 누구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가 흐려져 결국 일본 국가에 면죄부를 주게 되기 십상이다.

제국주의 반대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민족 억압 문제다. 이 점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한-일 관계가 더는 직접적 식민 지배 관계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그 옆씨, 즉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현재적 의미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제국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을 키우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런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 위해 어떻게든 과거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으로서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다시금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으로 여기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 제국주의가 있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과거사 ‘파워’는 있고 현재의 제국주의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한국 지배계급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에 기초해서 성장했다. 이 때문에 역대 한국 정부들도 한미일 동맹을 과거사 해결보다 중시했고, 결국 위안부 문제 해결은 매번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제국주의 분석에 기초해서 보지 않고 대중적 인기를 노린 반일 민족주의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왜 대중의 염원을 무시하고 배신을 거듭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협조해 힘을 키우려 하는 한국 지배계급에도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런 운동은 민족이나 성별 분단선이 아닌 제국주의 반대에 기초한 계급적 분석에 기초할 때 일관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

계속 좌우 줄타기하면서도
기업 살리기로 사실상 기울다

김문성

문재인의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얼마나 알맹이가 없었으면 입양 관련 말실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을까. 물론 겪어 보고 맘에 안 들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문재인의 말은 열악한 처지의 입양 아동을 교환·환불 가능한 상품 취급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중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머릿속엔 아이가 상품이 라는 발상 자체가 없다며 선진국에도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문재인이 지칭했다는 바로 그 제도를 4년 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아동 '쇼핑'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사실이 보도됐다.

정부·여당은 마치 문재인 말이 옳았음을 입증하려는 듯이 사전위탁제 제도화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과 경찰의 무책임·무능이 정부의 위기를 심화시킬까 봐 억지 몸부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재인이 1월 20일 장관 셋을 교체하자, 사람들은 '일 시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교환 되냐고 비꼬았다'

우파 눈치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대선이 연초에 치러지므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사실상 올해가 끝이라고 봐야 한다.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문재인이 신년사(11일)와 신년 기자회견(18일)을 했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내용이 없다.

오히려 신년사는 대중의 공감을 사지 못 할 정권 치적 자랑에 거의 3분의 2를 할애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등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이후 기자회견에선 하지못해

형식적 사과를 했다.) 지난해 봄 신년 지교회 이만희는 집단 예배를 강행한 책임으로 구속까지 됐었는데, 국가 수감시설의 미필적 고의 수준의 참사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확인되는 문재인 정부의 2021년 기조는 우파의 눈치를 보며 사용자들의 요구에 더 확실히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기업) 살리기, 부동산 공급 확대 문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존중하는 해법을 찾겠다는 답변 등에서 이 점이 두드러졌다. 사면 거부도 그나마 기층

의 염원에 부응했지만 그조차도 조건부 거부론이다.

부동산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근절이 목표'라고 말했지만 실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구해 왔다. 문재인은 공급 확대 방향으로 돌아서면서도 "공공 공급" 운운했는데,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은 결코 노동계급 사람들을 안심시킬 주거 대책이 못 된다. 문재인은 새 장관인 변창흠을 통해 "공공이 역할을 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변창흠은 SH 사장을 하면서 사이비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지지하고 고수했다.(임대 입주 10년 후에 주변의 오른 시세를 반영해 분양하는 정책으로 임대 입주자 다수가 사실상 준강제로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면서 박근혜의 대표적 개악인 한일위안부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하고 일본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을 비난한 것도 위선과 모순을 보여 준다. 한·미·일 안보 동맹과 한일 경제 갈등에 대한 재계의 거부감을 중시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배신한 것이다.

1년여를 '검찰 개혁'과 윤석열 찍어

내기에 매진해 놓고는 이에 사실상 실패하자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운운하는 희소리를 하는 것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명분이 완전한 위선이었다고 하구였음이 새삼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야당 후보로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기막힌 책략이라고 여겼겠지만 말이다.

월성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감사원·우파의 공격과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는 문재인은 감사와 수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검찰총장 관련 발언처럼 실질적인 갈등이 없는 듯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이 진정한 관심사는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덮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지, 탈핵에 있지 않다.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은 중도파 정부가 친기업적 오른쪽으로 기준선을 옮기면서도 포퓰리즘 전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불만이지만 의의가 있으므로 만족하자는 답변에서 드러나듯, 왼쪽의 불만을 이용해 우파를 설득하고 우파의 반발을 이용해 좌파를 견제하는 줄타기도 계속될 것임이 드러난다.

문재인이 바라지 않았을 이재용 구속

1월 18일 오전 문재인은 재벌 개혁("공정 경제")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오후에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뇌물죄로 법정구속 됐다.

다음 날, 이재용에게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정부 특사 자격을 줘서 미국에 보내려던 정부 계획이 알려졌다.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쫓값을 치르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재용은 최소한의 경제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승계하려다가 단죄를 받은 것이다. 불법 승계를 위해 뇌물을 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청와대는 이 판결에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가적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겠다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이재용의 삼성도 투자를 계속 늘려 왔다. 그러므로 이재용이 백신 구매를 위해 해외 유수의 제약 기업을

방문하려 했던 것에는 더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이재용의 유착을 단독 보도한 <한국경제>는 이재용에 동정적이고 그의 구속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정부에 조기 사면을 압박하려고 의도했을 것이다. <한국경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사실상의 기관지이고, 전경련은 재계가 정치권력자들과 소통하고 유착할 때 전통적으로 이용해 온 단체다. 전경련이 박근혜와 유착해 우파 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협성회(삼성그룹 협력사 협의회) 등 재계 전반이 이재용 구속에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 전부터 실형을 면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을 했다. '법보다 경제가 먼저'라는 것이다.

법보다 경제

자본가들은 틈만 나면 법질서를 강조하고, 노골적인 반민주적 말투로 "폐법 근절"을 떠들어 왔다. 그러나 자신들은 법치에서 예외이길 늘 바란다. 산업 재해와 끔찍한 참사들에 대해 자신들이 져야 할 법적 책임(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외면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노동 착취는 일차적으로 경제적 강제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주로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보다 경제가 우선이라는 그들의 논리는 자본주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확인하는 셈이다.

사실 일상적으로는 재계의 거물들은 잘 구속되지 않는다. 삼성의 불법 행위가 술하게 발각됐지만, 삼성 총수 3대 중 구속 수감자는 이재용이 처음이다.

이재용 구속 실행 판결은 대중을 달

래리고 박근혜 파면과 구속, 그리고 이명박 구속을 허용한 사법부에게는 또 다시 교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재용의 뇌물을 받은 박근혜에게 총 22년 형을 선고하고는 이재용은 (형량은 적게 주더라도) 구속 실행 없이 풀어주기가 곤란했을 것이다.(게다가 이재용이 이명박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재용을 풀어 준 2심 결과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렇게 새 재판부를 압박한 것은 사법 농단 이후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그런 최소한의 일관성을 통해서) 되돌리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법원은 명분과 위상 회복 필요성과 재벌 배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법원이 이재용을 구속한 것은, 지배계급이 무엇을 걱정하고 의식하는지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개혁 배신이 자동으로 우파에게 흡수되지 않고 있고, 전임 우파 정부들(특히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악행들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모호한 말을 한 것은 문제의 모순을 보여 준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계는 문재인에게 이재용 사면을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이 이를 전면 거부하기는 어렵겠지만, 감형 수준 일지라도 사면을 실행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와 환멸을 다시 촉발할 것이다.

김문성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5만 원 ☐ 기타 () 원(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이메일

농협 301-0010-1643-71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트럼프 이후, 악몽의 끝?

다음은 1월 13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마이크 데이비스가 했던 연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사회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도 시사회학·역사학·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며,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둘베개, 2008)에서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한 바 있다. 미국 노동운동을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 1994)의 저자이기도 하다.

극우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습격은 다름 아닌 공화당의 분열을 보여 줬다. [많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선 결과 인증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정반대였다. 다만 그들 중 가장 재능 있는 일부가 이를 거슬렀다. 이것은 단지 국회의사당 습격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11월 대선 이후 재계는 트럼프 반대로 결집해 왔다. 현대 공화당 정치의 역사적 기반인 전미제조업자협회는 부통령 펜스에게 수정헌법 제25조(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규정)를 이용해 트럼프를 퇴진시키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이 양극화됨에 따라, 상원 쪽 공화당은 전통적 기반인 재계에 동조하고 있다. 우익 포퓰리즘적인 쪽은 트럼프 편에 남아 있을 것이다. 아주 놀라운 일이다. 등록 유권자의 약 40퍼센트가 트럼프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받은 표의 약 5분의 1은 트럼프에게 비판적임에도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다. 트럼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어리석게도 대선에서 경제 문제를 포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문제가 일자리 문제와 분리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했다. 세상에서 이만큼 주력하기 쉬운 문제도 없었다. “국민들은 일터로 돌아가야 하며 그러려면 전국적 팬데믹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탓에 트럼프는 ‘일자리 후보’를 자처할 수 있었다. 노동운동은 그래서 트럼프에 투표

한 사람들 일부를 되찾는 일을 시작할 책무가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격적이었던 것 하나는 노동운동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도처에서 눈에 띄는 간호사연합 같은 예외도 있었다. 간호사연합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 주요 노조였다. 하지만 많은 노조, 특히 산업 부문의 노조 지도부는 마치 자기 조합원들을 두려워해 그들에게 트럼프한테 투표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싸움을 벌이지 못하는 듯했다.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친노동, 친노조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진보파는 바이든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한다. 바이든은 틈을 제공했다. 노동운동 내에서 새롭게 조직화 활동을 벌이고 평조합원 수준의 지도력에 새로 활기를 불어넣는 데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바이든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복사판이다. 진보파는 바이든이 진보파 지도자들을 아무도 요직에 임명하지 않은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진보파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아슬아슬하지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덕분에 바이든 지지자들에게서 “단결해야 하니까 너무 급진적인 것은 안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 샌더스의 민주당 예비경선 선거운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했다. 30세 이하 유권자 상당수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선호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역사의 특별한 순간이었다.



대통령 바이든과 부통령 해리스는 위기 속에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샌더스 측은 운동이 진보 후보들을 도울 것이고 진보 후보들이 운동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버니 샌더스는 노동자들의 행동과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박수를 보내 왔다. 그러나 언제나 그다음에는 “이 진보 후보에게 돈을 보내지”거나 “이 탄원서에 서명하자”고 했다. 그 결과 공화당의 극우 기반이 팬데믹 관련 시위를 독차지하게 됐다.

전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는 마스크를 제대로 쓴 좌파들이 전염 위험을 거의 키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절대 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거리 · 일터 · 지역사회 투쟁으로 의회 밑바닥 아래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행동을 지속하고 왼쪽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사회주의적 요구가 갑자기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요양원 산업은 분명 해체돼야 한다.

이 산업 대부분을 지배하는 사모펀드들을 퇴출해야 한다. 아마존과 SNS는 이제 필수 인프라다. 민주적 통제하의 사회적 소유를 요구해야 한다. 5년 전에 이런 말을 하면, 그때는 모두들 하품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이해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더 광범한 진보적 운동 내에서 진정으로 급진적인 해결책을 주장해야 한다. 좌파는 매우 파편화돼 있다. 실질적인 전국적 연합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당(DSA)은 지역 수준에서는 실질적 영향력이 있지만, 전국 수준에서는 어떠한 단결된 대응이나 일관된 강령을 제시할 만큼 조직돼 있지 않다. 미국의 상황은 매우 극단적이다. 단지 [코로나19] 사망자만 그런 게 아니다. 실업률이 놀랄 만큼 치솟고 유색인종 지역에서 부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3월은 마치 잠자리에 들 때는 2020년이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니 1932년이 된 것 같았다. 그만큼 사회적 투쟁에 불을 지필 연료가 쌓이게 될 것이다. 바이든은 제2의 뉴딜 운운하지만,

그것만큼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도 없다. 자본주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후진국들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다. 이곳에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조건에서는 바이든이 어떠한 대답도 내놓을 수 없다. 좌파는 여기에 답할 현실적 전망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난 3월 말에 바이든 선거 캠프는 샌더스 선거 캠프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샌더스 선거 캠프는 기존 오바마케어[의료보험 의무 가입 제도]에 공적 보험 선택지를 추가하고 민간 보험 회사의 구실은 내버려 두자는 바이든의 제안을 수용해 버렸다.

그래서는 안 됐다. 전국민 단일건강보험(‘메디케어 포 올’)은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다. 더군다나 이번 위기 동안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상실한 상황이다. 선거주의 진보파가 마주한 시험대 하나는 어떻게 이 문제로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요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요구다. 선거주의 진보파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는 금세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와 일터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항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모두가 극우파의 성장과 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전혀 없는 일은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막대한 과제가 있지만,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8호 / 번역 김동욱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공허한 약속을 경계해야 한다

소피 스카이어

1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렇다고 흑인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끝나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암울한 4년 이후 미국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요란한 찬사가 취임식 자리에서 바이든에게 쏟아질 것이다. 사장들에게 “정상 상태”는 바이든 정부가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지속적 이윤 창출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유나이티드항공, 아마존, 우버 등 다국적기업들이 이번 주에 열리는 바이

든 취임 축하 행사의 비용을 댔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최소한 말이라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든은 코로나19가 미국을 휩쓸고 있는 와중에 취임한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이란과 재협상에 나서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며,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뒤집으려 한다. 하지만 내세운 것보다 알맹이는 훨씬 빈약할 것이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휴교나 비필수 작업장 조

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의 생활 수준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약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다. 바이든은 원하는 법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행정부 · 상원 · 하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변화조차 기업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애초에 바이든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 2000달러(약 220만 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액수는 1400달러(약 150만 원)로 떨어졌다. 나머지 600달러는 지난해 12월에 이

미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소위 “2000달러 지급” 약속은 민주당이 1월 초 조지아주(州)에서 상원 의석 두 석을 확보하는 데서 핵심적이었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의 몇몇 이민자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벌써 바이든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강경하게 가로막을 기색이다. NBC 뉴스 인터뷰에서 한 바이든 정부 인사는 “당장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주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동맹들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과 달리, 바이든은 나토(NATO) 핵보유국 동맹들과 전통적 동맹들과의 연

계를 재확립하려 한다. 전 세계의 경쟁자들, 특히 중국을 물리치려고 광범한 세력을 재구축하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긴축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기후 재앙 대책은 실행하지 않으며, 전쟁을 지지할 것이다. 저항이 없다면 바이든은 인종차별적 우파가 (트럼프가 있든 없든) 온존하기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트럼프와 맞서 싸웠던 운동을 더 강력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바이든 정부가 ‘허니문’을 맞이해선 안 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8호 / 번역 김준호

※ 웹사이트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2013년 부통령 시절에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바이든

대북 제재 강화하며 불안정 키울 바이든 정부

김영익

1월 21일 새벽(한국 시각)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김정은과 ‘러 브레터’를 주고받은 트럼프는 물러나고 그를 “폭군”, “깡패”라고 부르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없었다. 비록 트럼프와 김정은이 세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말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아무것도 북한에 내주지 않아 왔음을 강조해 왔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신에 제재를 일부 풀어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외려 트럼프 임기 내내 대북 제재는 꾸준히 강화됐다. 미국 대선이 끝난 후, 지난해 11월 중순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추가하기도 했다.

얼마 전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초에 작성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을 다룬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경제·외교·군사·정보 등의 수단들을 동원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정권을 약화시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비록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 4년의 실천은 기밀 문서에 적시된 것에 훨씬 가깝다.

제재 구루

바이든 정부는 이와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대통령 문재인은 바이든 정부와 “코

드가 맞는 점이 있다”며 여러 현안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중에는 한반도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바이든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정도로 남북문제를 잘 안다”고 추켜세우며 바이든 정부 하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대선 TV 토론회에서 바이든은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하는 조건 하에서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 중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관련한 인사들이 많다. 대체로 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비롯한 대북 압박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예컨대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웬디 셔먼은 2016년에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하려면 북한 정권의 붕괴나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느낄 만큼 혹독한 제재가 필요하다.” 웬디 셔먼은 오바마 정부 때 한국 정치인들에게 ‘과거의 적(일본)을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하면 안 된다’며, 한·일 협력을 촉구한 자이기도 하다. 대중국, 대북 압박의 수단인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될 데이비드 코언은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 차관을 지내며 이란·러시아·북한 등을 상대로 각종 제재를 설계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그에게 “제재 구루”라는 별명을 붙여 줬다. (“구루”는 영적 지도자나 어떤 분야의 달인, 전문가를 뜻하는 표현이다.) 코언은 2017년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정부더러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후에는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대북 제재가 흔들린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전임 정부들처럼 패권 전략을 관철하려고 북한 ‘위협’을 과장해 이용할 공산이 크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사드의 한국 배치 등을 정당화한 것처럼 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등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확대하는 등 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도 동반돼야 하는데, 북한의 ‘위협’은 그 명분이 될 공산이 크다.

타미플루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아 왔다. 미국은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지위를 무기로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는 그 자체로 위선이다. 북한(그리고 이란)과 달리,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인도도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 인도를 대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대북 제재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데 기여했다. 제재 강화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며 북한이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대북 제재로 가장 크게 고통받은 쪽은 북한의 평범한 대중이다. 2017년 의학 전문지 <랜싯>의 편집장 리처드 호튼은 대북 제재가 ‘2500만 북한 주민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등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기구(주사기, 엑스레이 장비 등), 식수 관련 장비(파이프, 보일러 등), 농업 자재 등이 모두 제재 품목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예컨대 산림 녹화 지원을 위해 북한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비닐은 되지만 철제는 제재 품목이라 보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제재 품목을 북한에 들이려면 구호기관들은 유엔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진행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적 지원 사업의 건수는 적다. 제재 면제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돼 시급한 인도적 구호 조치가 때를 놓친 사례들도 있다.

그리고 금융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금융 기관 등은 인도적 대북 지원에 관여하는 것을 꺼린다. 그래서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적 사업조차 물품을 제공할 업체를 선정하거나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을 하기가 어렵다.

북한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경을 봉쇄하면서 아직 공식 확진자는 없다고 하나, 지금까지 북한도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했을 만큼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북한은 유럽과 국제 구호기관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제재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 등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대북 제재에 협

력해 왔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모두 대북 제재와 얽힌 문제들이었다. 2018년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도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며 미국이 제지한 적이 있다. 타미플루는 되지만, 타미플루를 나를 트럭이 제재 품목이라는 이유에서다. 타미플루를 주고 싶으면, 지게로 나르라는 얘기였을까?

바이든 정부 하에서 대북 제재는 강화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 진전에 해로운 뿐 아니라 북한 대중의 고통을 악화시킨다. 올봄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더불어 대북 제재 강화에도 반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아랍의 봄' 10주년 **이집트 혁명**
— 세계를 뒤흔들었던 18일

★ '아랍의 봄' 10주년
반란의 튀니지, 그 10년

★ 계속되는 인도 농민 투쟁
운동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가 좌절되다

★ 안전보다 이윤 우선해
경비 인력 감축 또 시도하는 홍익대 당국

★ 공공병원 간호사를 “**인력 부족이 환자·병원 노동자를 사지로 떠밀고 있다**”

★ 신간 소개 <내 이름은 사이언/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명랑하고 진솔하게 그린 트랜스젠더의 삶

🔍 용어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인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 정부도 제재하는 조치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계기로 살펴보다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차승일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자면 나치즘과 파시즘인데, 나치는 독일 히틀러의 정당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파시즘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정당 이름에

서 나온 것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은 특별한 극우로, 매우 모순된 중간계급 대중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같은 뜻으로 보면 된다. 이 정의가 더 자세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서구에서 파시즘의 재등장

올해 2021년은 홀로코스트가 시작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홀로코스트는 나치당이 제2차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홀로코스트로 약 600만 명이 죽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5000만~7500만 명이 죽었다.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서구 반파시즘 운동은 “Never again!”(두 번 다시는 안 된다)이라는 구호를 오랫동안 외쳐 왔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보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극우와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로 얼마 전인 1월 6일 미국의 극우들이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 난입하고 전국 각지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다.

그날 시위대의 핵심에는 파시스트들이 있었다. 미국의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트럼프 집권 시기에 크게 성장했다. 1월 6일 사건은 그들이 전국적으로 조율된 행동을 벌일 만큼 세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만큼 파시스트가 성장하기 유리하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자신은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쫓아서 임기 내내 극우와 파시스트를 고무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극우와 파시즘의 성장은 유럽에서도 관찰된다. 프랑스에는 국민연합(국민전선'의 후신)이라는 강력한 파시스트 정당이 있다. 그 대표인 마린 르펜은 2017년 대선에 출마해 1000만 표 넘게 득표했다. 다음 프랑스 대선은 내년인 2022년에 열린다. 르펜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지지율도 확고하게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에는 우익 포퓰리스트와 파시스트들이 함께 구성한 혼합형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있다. 이 정당은 현재 독일 의회에서 700석 중 90석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자유당이 있다. 자유당은 1955년에 나치 친위대 장교들이 만든 고전적 파시스트 정당인데 얼마 전까지 우파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그리스에는 황금새벽당이라는 선명한 파시스트 정당이 있다. 황금새벽당은 거리에서 좌파와 이민자 공격을 일삼았다. 2012~2015년에는 국회의원 20명가량을 보유했었다. 반파시즘 운동이 꾸준히 성장해 2020년 10월 그리스 법원은 황금새벽당을 범죄 조직으로 판결했다.

파시즘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맞서 싸울지 아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일이다.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이날 시위대의 핵심에는 파시스트들이 있었다

파시즘은 무엇인가?

파시즘의 고전적 사례인 1920년대 말과 1930년대의 독일 나치를 살펴보면 파시즘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에 대해 보겠다.

이에 관해서는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가 당시에 쓴 글들과 분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로츠키는 파시즘이 극우의 일종이지만 특수한 극우라고 분석했다. 첫째, 형태상의 차이점이다. 파시즘은 소수 군부 장성들만이 관여하는 쿠데타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중 운동**이었다. 둘째, 사회적 기반의 차이이다. 파시즘은 **중간계급을 핵심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극도로 모순돼 있다. 셋째, 목표의 차이이다. 파시즘은 사회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성장하는데,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을 모조리 파괴해 노동계급을 원자화시키고 의회제 민주주의 자체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모순돼 있어도 이 목표 하나만큼은 명확하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됐다. 그러나 1920년대에 독일(바이마르공화국)은 유럽에서 의회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였다. 이 시기 대부분 동안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사회민주당 또는 사민당)이 집권하거나, 그렇지 못해도 선거에서 2등을 했다. 그러나 1930년대 초에는 정치·사회 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기성 부르주아 정당이나 사회민주당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영향력

사실 1920년대 내내 히틀러와 나치당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 1923년 11월 이른바 맥주홀 쿠데타라고 불리는 사건은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에 불과했다(물론 정치적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1928년 총선에서도 나치당은 겨우 2.6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1930년에는 18.25퍼센트를 득표해 제1 야당이 됐고, 1932년에는 37.4퍼센트를 득표하며 제1당이 됐다. 바로 그 사이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과 1918년 혁명 직후인 1920년대 초에는 잠깐의 회복기가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세계 경제 공황이 닥친 것이다. 그 여파로 독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1932년 독일의 실업자는 공식 통계로도 600만 명이나 됐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업자도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나치당의 핵심 지지 기반은 중간계급이었다. 극심한 경제·사회 위기 속에서는 중간계급의 삶도 크게 망가진다. 이런 때 자본가 지배계급도 강력하지 못하고 좌파와 노동운동도 그 대안이 되지 못하면, 파시스트가 중간계급의 좌절감과 불만과 분노를 이민자와 소수 인종 등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데마고기(감정적 거짓 선동) 하며 성장할 수 있다.

독일이 극심한 위기에 빠지자 나치의 선동이 대중에게 먹히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치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반유대주의 선동에 기대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나치는 극도로 모순된 자기 운동의 결속을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나치는 유대인 금융자본가, 사민당, 공산당, 러시아 볼셰비키를 비난하며 중간계급 대중의 분노를 뒤틀리게 대변했다.

신화

나치의 선동은 중간계급에게는 먹혔지만 노동계급에게는, 특히 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별로 먹히지 않았다. 나치당이 1위를 한 1932년 두 차례 총선에서도 노동계급 정당인 사민당과 공산당이 얻은 표를 합하면 나치당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더욱이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나치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신화와 다른 점 또 하나는, 독일의 히틀러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든 선거로 집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히틀러는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했고 무솔리니는 왕이 총리로 임명했다. 이는 파시즘을 선거를 통해, 또는 헌법 수호를

통해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적 수단으로는 사회·정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시스트들에게 정권을 쥐서 노동계급을 꺾멸시키고자 했다.

파시스트들이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동계급 조직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대중 운동인 데다가 이를 위한 폭력 조직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좌파와 노동자 운동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치의 집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 당시 사민당과 공산당은 당원 수도 훨씬 더 많아 둘이 합치면 선거 득표율도 더 높았고, 거리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았고, 각각 군사조직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런 노동계급 조직들이 단결하지 못하면서 나치의 성장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렇다 할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권력을 잡았다.



“파시즘 두 번 다시는 안 된다” 2020년 그리스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 시위’

파시즘 용어를 느슨하게 쓰지 말고 엄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고전적 파시즘을 살펴봤으니 태국 기부대는 일종의 파시즘일까 하는 의문이 들 만도 할 때가 됐다.

앞에서 봤듯이, 파시스트는 중간 계급 대중에게 먹힐 만한 주장과 요구를 내놓고 모든 노동단체와 의회제 민주주의의 파괴를 목표로 한다. 반면, 한국의 태국기부대는 반박근혜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 박근혜를 찬양하고 그의 석방을 주장한다. 반재벌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 재벌을 옹호한다. 무엇보다 의회제 민주주의 파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좌파와 좌파적 노동조합을 증오하고 비난하지만 말이다. 태국기부대는 전통적 우파 정당과 지배계급에 대해서도 의존적인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태국기부대는 여러 면에서 파시스트와 성격이 다르다. 물론 그 속에서 미래 파시즘 운동을 이끌 인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질적으로 다른 조직과 운동이 등장함을 뜻한다.

물론 파시즘의 성장은 일탈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심한 위기에 빠지면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태국기부대를 파시즘으로 오인하면 진정한 파시즘이 등장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독일 좌파들이 나치의 성장에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못한 이유 하나는 파시즘이라는 독특한 위협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당시 사민당은 파시즘을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부정확하게 봤다. 그러면서 나치가 헌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지지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은 힌덴부르크는 헌법 절차에 따라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했다. 그리고 나서 사민당은 나치의 철퇴를 맞았다.

당시 공산당은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파시즘을 대자본의 도구로 봤다(“독점자본의 테러주의 세력”). 그래서 나치가 1930년에 득표율이 경총 뛰었는데 대자본에 맞서

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런 관점은 나치의 사회적 기반이 중간계급이라는 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공산당이 ‘사회(주의적) 파시즘’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사민당과 나치가 쌍둥이라고까지 주장했다는 점이다. 사민당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조직이고 나치는 노동계급 조직을 깡그리 파괴하려는 세력이라는 결정적 차이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 실천적 결론은 재앙적이게도, 사민당과의 만나치 공동투쟁의 거부였다.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나치의 철퇴를 맞았다.

한국 좌파 중에는 파시즘 개념을 너무 넓은 나머지, 개념 규정의 의의마저 사라질 만큼 느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한국의 좌파 일각에서는 트럼프 지지 운동의 기반을 백인 하층 노동계급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미국 선거에서 주류 정치세력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반감을 가진 백인 하층 노동계급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많이 투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월 6일 미국 전역의 폭동과 난동 참가자 다수는 광대한 미국 땅을 가로질러 오고 군사 장비를 마련할 돈이 있는 비교적 유복한 자들이었다. 수동적 투표 행위와 투표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회세력에 기반을 두고 반트럼프주의 운동(그리고 반파시즘 운동)을 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좌파의 다른 일각에서는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주의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자본을 일관되게 대변해 온 공화당 주류 세력과 트럼프 파 사이에 긴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반트럼프주의 운동(그리고 반파시즘 운동)을 미국 공화당 반대 운동으로 축소 또는 치환할 수 있다.

1930년대와 오늘날의 공통점과 차이점

1930년대와 지금의 공통점은 사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위기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불황에서 시작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또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는 일 등을 보며 일각에서는 이제 곧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그 정상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낸 필연적 요인들을 배제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위기, 팬데믹 위기, 기후 위기, 군사적 경쟁 등 여러 면에서 “항구적 재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 첫째, 위기의 수준이다. 지금 위기도 심각하지만 1930년대는 더 심각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전쟁과 중부 유럽 혁명을 겪은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나라에서 혁명적 운동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세계적 대불황이 닥친

시기였다. 그래서 현재 주요 나라 지배계급들은 아직은 파시즘의 통치에 기대지 않는다. 물론 여러 증거는 위기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심각해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둘째, 사민당과 공산당 같은 노동계급 조직이 당시에 비해 크게 약해져 있다는 점이다. 공산당들은 소련 붕괴와 함께 거의 사라지거나 극도로 취약해졌다. 사민당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실행하면서 노동계급의 조건을 오히려 공격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해졌다.

그리고 개혁주의·스탈린주의 조직뿐 아니라 급진적·혁명적 좌파도 지금은 상당히 약하다.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이 약한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좌파와 노동자 운동이 약하므로 지배계급이 파시즘에 권력을 내줘야 할 필요성을 지금은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위기 수준의 차이를 말했는데, 사회적·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함의는, 노동계급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노동자들의 일부도 극

어떻게 맞설 것인가: 공동전선

그럼 파시즘의 성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의 조직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민당과 공산당이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트로츠키는 그것을 공동전선이라고 불렀다. 서로 안 맞는 면이 많더라도 또 이론이나 정치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도 노동계급 조직들이 어깨를 걸고 공동의 적에 맞서서 공동의 행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는 여러 ‘연대체’가 존재하는데, 트로츠키가 말한 공동전선은 한국에서 사실상 별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연대체다. 공동전선은 상층뿐 아니라 기층 수준에서도 조직을 만들어 대중운동을 건설한다. 몇 안 되는 특정 구체적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노동계급과 파차별 사회집단들이 힘을 합치지만, 운동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비판, 관련 쟁점 외 쟁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각 조직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연대체 대다수는 기층 운동을 건설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고, 정책 대안(개

혁입법을 위한) 마련과 제안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공동전선으로 운영되는 연대체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

광범하게 단결하더라도 경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반파시즘 운동이 함께 협력할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착취와 차별을 유지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 힘쓰면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 왔다. 그 때문에 쌓인 대중의 불만을 트럼프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바이든에게 투표한 평범한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은 단결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민주당은 단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계급과 좌우를 가로지르는 연합을 추구하는 전략을 인민전선이라고 부른다. 계급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인민전선 전략은 선거 득표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서

파시즘의 성장은 이례적 일탈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극심한 위기에 빠질 때 중간계급은 삶이 나락으로 빠지면서 극도의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그럴 때 자본가(지배) 계급이든 노동계급이든 대안이 되지 못해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파시스트들이 그 좌절감과 분노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

는 위기에 빠지는 경향을 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파시즘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파시즘이 성장할 비옥한 토양을 마련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정치는 파시즘의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설 방법과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질수록 개혁주

우와 파시스트의 주장에 끌릴 가능성이 더 크고 실제로 노동계급 중에서도 파시즘 정당 지지표가 꽤 나온다는 것이다. 노동자 정당이나 노조 등 노동계급 조직이 노동자와 여타 차별받는 사람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협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당시에 달리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은 거리 전투나 무장 조직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많다는 것이다. 1930년대 초는 제1차세계대전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고,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해서 정치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넷째, 현재의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거리 폭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다섯째, 고전적 파시즘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우익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익 포퓰리즘과 혼합형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대응할 때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 대중 투쟁 건설에는 해롭다.

공동전선의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그리스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에서는 노골적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2010년대에 크게 성장했다.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2008년 위기 직후인 2009년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운동을 함께 건설하자고 발의하고 여러 좌파 및 노동계급 세력과 함께 10여 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그 운동 안에는 혁명적 조직, 개혁주의 조직, 노동조합, 이주민 단체, 성소수자 단체 등이 광범하게 참가하고 있다. 몇 년 전 파시스트들이 거리에서 힙합 가수를 살해했을 때, 6만 명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아테네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을 거리로 불러모은 것이다. 최근에는 황금새벽당이 범죄 조직 결성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은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이며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애썼다. 그리고 5년 만인 2020년 10월 7일에 승리를 거뒀다.

의 지도자들은 근원적인 보수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를 극복하려면 혁명적 좌파가 기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개혁주의 세력과 공동전선을 펼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혁명적 리더십의 건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지면 제약으로 내용을 일부 축약했다.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 wspaper.org에서 볼 수 있다.

2011~12년 아랍의 봄에서 최근 중동 반란까지:

필자 **박이량**은 영국의 중동 전문 잡지 《미들 이스트 솔리다리티》 공동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 대학(SOAS)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넣은 것이다.

튀니지의 한 청년 노점상이 생활고를 비판하며 분신한 사건을 계기로 ‘아랍의 봄’ 혁명이 발발한 지 10년이 흘렀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바레인 등지로 번지며 중동 전역의 부패한 지배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랍의 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인가? ‘아랍의 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튀니지에서 출발한 혁명이 다른 아랍 나라들로 확산하자, 당시 일각에서는 이제 중동에 민주주의가 찾아왔다는 식의 낙관론을 펼치는가 하면, 이슬람주의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고, 둘 다 틀렸다. 혁명은 부침을 겪고 있으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아랍의 반란들을 돌아보고자 한다면, 이 반란들이 일어난 원인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먼저 복잡한 종교 갈등, 각종 종파 갈등 등을 걷어내고 나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선은 계급 분단선이다. 주류 지배계급이 세속주의자였든(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등) 이슬람주의자였든(수단 등) 간에, 혁명이 일어난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있었다.

2008년 경제 위기와, 그에 앞서 길게는 수십 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인해 지배계급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반감은 쌓여 왔다. 아랍 지배계급들은 제국주의 세력과의 협력과 비호 속에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며 온갖 부패를 저지르고 부를 축적했다. 때때로 일어난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됐고 지배자들은 시위대를 서슴지 않고 학살했다.

하지만 2011년 많은 아랍 민중은 임계점에 달해 있었다. 평소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민중의 거대한 분노와 만나 견잡을 수 없이 변졌다. 튀니지에서는 과일 수레를 압수당한 청년이 분신했다. 시리아에서는 한 지방 도시의 아이들이 반정부 낙서를 벽에 했단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당했고 일부는 살해됐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유명한 ‘아랍의 봄’의 구호인 “빵, 자유, 사회정의”가 이렇게 탄생했다.

생활고로 인해, 혹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시작된 반란의 배경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있었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주요 도시 중심부와 광장은 점거됐다. 평생 동안 한 명, 많게는 두어 명의 독재자 하에서 자라온 아랍 청년들은 제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 물결은 작업장으로 변졌고 이



“민중은 정권 퇴진을 원한다” 2011년 11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 운집한 인파

집트와 튀니지 등지에서는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노동계급

노동계급의 투쟁은 ‘아랍의 봄’에서 결코 빠트려서는 안 되는 요소다. ‘아랍의 봄’ 이전에도 엄혹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영역은 노동운동이었고, ‘아랍의 봄’과 함께 찾아온 정치적 자유의 시기에 노동계급은 전진했다. 반란이 일어난 곳 중 노동계급이 가장 전진했던 곳은 이집트였다.

1월 25일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물러났다. 무바라크 퇴진 후 작업장에서 독립 노조 결성과 파업 등의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혁명에 참가한 평범한 노동계급은 여전히 자신들의 직장에서는 “꼬마 무바라크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부패한 경영진 퇴진 등을 걸고 수많은 작업장이 파업과 점거에 들어갔다.

일례로, 혁명 당시 카이로 북부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 청소 노동자 할 것 없이 단결해 구 정권과 결탁했던 병원장을 말 그대로 병원에서 쫓아냈다. 뒤이어 병원 노동자들은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병원들의 노동자들과 연대에 나섰다. 각지에 설립된 이런 독립 노조들을 한데 묶고 혁명의 노하우를 전수, 전파하는 데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

하지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아직 소수였고 조직의 규모는 급진화한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노동계급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상황에서 치

러진 2012년 첫 민주적 대선에서는 오랜 기간 탄압 속에서 야당 생활을 하며 지지 기반을 다져 온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와 정의당’이 승리했고 무함마드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대개는 중간계급, 지식인, 일부 자본가 계급이 중심인 주류 이슬람주의 정당들의 지도부는 혁명의 요구인 근본적인 사회 변혁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튀니지에서) 혁명 후 집권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온건한 개혁주의자들답게 혁명의 요구와 자본주의 국가 발전이라는 모순된 두 지향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친시장, 긴축 정책을 펼치며 민중의 삶을 공격했다.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지는 빠르게 실망으로 변했다. 이집트에서는 군부가 이런 불만을 이용해 2013년 7월 쿠데타를 일으켜 압둘팟타흐 시시(이하 엘시시)가 집권하고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노동계급의 운동이 더 급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집권한 이슬람주의자들은 반혁명 세력의 반격 앞에서 취약했다.

엘시시가 집권한 후 무슬림형제단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찍혀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다. 2013년 무르시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던 카이로 ‘라바아 광장’에 군대가 들어가서 2천 명을 살해했다. 무르시는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했고 활동가 수만 명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탄압의 화살은 이슬람주의자들만 겨냥하지 않았다. 수많은 세속 인권운동가, 좌파 활동가들도 ‘SNS상 가짜 뉴스 유포’, ‘거짓말로 시위 선동’, ‘무슬림

형제단과 테러 모의’ 등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구속돼 있다. 한국에서도 석방 캠페인을 벌인 바 있는 이집트 사회주의 활동가 마히누르 엘마스리, 하이탐 모함메딘 등도 다시 구속됐다.

상황이 엄혹하게만 보이지만, 정권의 히스테리적인 탄압의 이면에는 위기감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에 양보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이미 이집트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 폐쇄에 항의하는 철강 공업 노동자 수백 명의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저항은 계속 벌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 다시 반란의 물결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제국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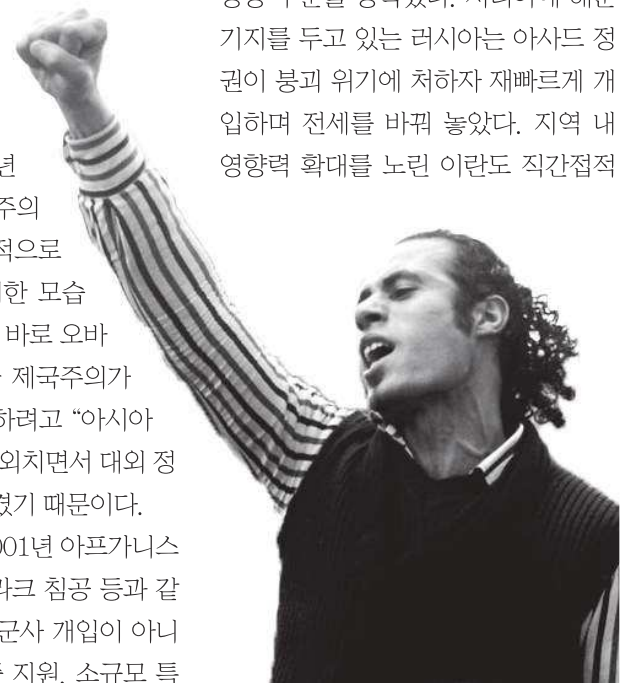
한편,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해 비극으로 고통받는 곳들이 있다. 바로 시리아와 리비아, 예멘 등이 대표적 경우다. 지난 10년 동안 중동에서 제국주의 갈등의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과거와 다소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 제국주의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외치면서 대외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겼기 때문이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 등과 같은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 개입이 아니라 무인기 폭격, 공중 지원, 소규모 특

수부대 투입, 훈련 교관 파견, 현지 동맹을 활용한 간접 개입 등이 주된 방식이 됐다. 이처럼 대규모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미국은 현지의 동맹들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개입 방식 변화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군사적 공백을 낳았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 질서에 균열을 낸 ‘아랍의 봄’이 찾아오자 러시아는 물론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역내의 아류 제국주의 세력들이 그 공백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42년간의] 카다피 독재를 무너트린 리비아, [33년 독재자] 살레를 내쫓은 예멘, [세습 대통령] 아사드를 궁지로 몰아넣은 시리아 등지에서 혁명 세력과 민중이 처한 오늘의 비극은 이런 제국주의 경쟁의 안타까운 결과물이다.

평화적 시위로 시작한 시리아 혁명은 아사드 정권을 무력화하며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시리아에 해군 기지를 두고 있는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재빠르게 개입하며 전세를 바꿔 놓았다.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린 이란도 직간접적



전개 과정과 의미



2011년 1월 25일, 이집트 혁명의 첫 시위를 이끄는 청년들

으로 아사드를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걸프 왕정들은 수니파 반정부 민병대를 지원했고 종파 갈등을 부추기며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한다.

애초에 소련에 맞설 용도로 미군이 훈련시킨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이들이 만든 알카에다 조직원들, 미국의 점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군대 출신 장교들 등이 주도해 만든 조직이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 국가'(이하 아이시스)다. 이들은 시리아 혁명이 유혈 탄압으로 위기에 봉착하자 대안을 잃은 이들, 서방과 러시아 등의 폭격에 대한 분노 등을 자양분으로 세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아이시스는 그 뿌리부터 제국주의가 낳은 끔찍한 괴물이었다.

평화적 민중 봉기로 시작한 시리아 혁명 세력은 종파에 따라, 지원받는 제국주의 세력에 따라 갈갈이 분열했고 인구의 절반은 난민으로 전락했다. 현재 아사드 정권은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고 터키의 지원을 받는 일부 반정부 세력이 시리아 북부에서 간신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민중이 다시 저항의 목소리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리비아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직접 개입했고 카다피가 시위대에 살해당한 이후에도 석유 이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끔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을 지원했다. 친서방 망명 인사들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GNA)는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국의 경제적 ·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걸프 왕정들과 이집트 등의 지원을 받는 군벌 세력으로 인해 리비아

는 오랜 기간 내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예멘에서는 장기 집권을 한 독재자 살레가 반정부 시위로 쫓겨난 이후,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대리전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 왕정의 지지를 받는 새 내각이 지난달 들어섰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의 휴전과 개전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멘인 수백만 명이 아사드 위기에 처하고 많은 이들은 난민이 됐다.

정세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제국주의 경쟁의 희생자는 민중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내세우며 "서구적 가치"를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서방 제국주의의 패권이 지속되는 한,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지역의 아류 제국주의 세력 간의 경쟁이 지속되는 한, 이집트 군사감옥과 리비아의 인신매매 시장과 지중해 한복판의 가라앉는 보트에서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아랍의 봄'

하지만 혁명은 단기성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지난 2년은 아랍 민중이 이를 현실에서 보여준 기간이었다. '아랍의 봄'이 다소 비껴갔던 지역에서 반란의 물결이 다시 일어났다. 알제리와 수단에서 수십 년 집권한 독재자들이 반란으로 인해 물러났고, 이라크와 레바논의 민중은 대규모 시위 속에서 뿌리 깊은 종파 · 종단 갈등을 초월한 단결을 보여줬다.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 지역마다 2011년 당시 주목받았던 광장 점거 방식의 시위 형태가 다시 등장했다. 수단

하르툼, 레바논 베이루트, 이라크 바그다드 등 도시 중심의 광장을 시위대가 길게는 수개월씩 점거하며 정권에 맞섰다. 마치 2011년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처럼, 시위대는 종파, 종교, 인종, 성별 구분 없이 단결하며 아름다운 연대를 과시했다.

동시에 10년 전 '아랍의 봄' 혁명을 촉발한 물질적 조건이 변함없이 존재하며 여전히 새로운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억압된 민주적 권리,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축적된 민중의 불만이 작은 불씨에도 큰 반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여기에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와 최근의 팬데믹 위기는 가뭄이나 빈곤과 불평등에 신음하는 중동 민중을 더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다.

수단과 알제리

2019년에 일어난 반란 중 가장 전진한 곳은 수단이었다. 빵 가격 인상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되자 거리로 뛰쳐나온 초등학생들의 시위로부터 반란이 시작됐다. 30년 동안 수단을 통치했던 오마르 알바시르가 퇴진했고 군부는 강력한 대중 운동에 권력을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수단 민중은 노동조합 연맹인 수단직능인협회(SPA)를 중심으로 대규모 거리 시위, 총파업, 광장 점거를 조직했다. 지역마다 '투쟁위원회'가 세워지고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는 군부 정권에 저항했다.

물론 한계도 존재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군부와와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 정도로 제한했다. 노동계급의 투쟁을 전진시킬 수 있는 좌파가 부재한 탓도 있었다. 수단공산당(SCP) 등은 오랜 탄압으로 세력이 약화돼 있었다. 결국 군부와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이후 개혁주의 지도자들과 군부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에는 지연되는 개혁에 대한 불만, 군부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수십만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수단의 혁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알제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2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가 5선 출마를 선언하자 불평등, 실업,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에 쌓여 온 불만이 폭발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많은 작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노동자들이 친정부 어용노조 관료들을 내쫓고 파업에 돌입한 곳들도 생겼다. 결국 부테플리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다.

알제리 군부와 구 정권의 인사들은 코로나 사태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제리 인들은 혁명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구 정권 체제의 모든 것을 갈아엎기 전까

지 혁명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혁명을 통해 근본적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대와 공권력이라는 장벽을 넘어 국가기구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이 조직돼야 하고, 개혁주의를 넘어서는 혁명적 정치가 필요하다.

레바논과 이라크

한편 2019년 10월, 레바논과 이라크에서는 전례 없는 종파 · 종단 간 연대와 단결이 각각 꽃피었다. 오랜 제국주의 개입과 내전으로 인해 종파 · 종단 간 불신과 갈등이 뿌리 깊은 두 지역에서는 결코 보기 쉬운 풍경이 아니었다. 두 나라의 시위대 모두 실업, 불평등, 그리고 부패한 지배자들에 분노했다. 수도 중심의 광장을 점거한 시위대는 수니파, 시아파,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부상자를 치료했다. 시위대는 지배자들이 강요하는 종파에 따른 줄 세우기를 거부하고 종파 · 종단 간 차이를 뛰어넘는 계급적 단결을 보여줬다.

동시에 이 두 지역을 통해 기후변화가 신자유주의와 만나 민중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투쟁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레바논에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 3대뿐이던 산불 진화 비행기를 이미 팔아 치운 상황이었다. 결국 시위 진압용 물대포까지 동원해 산불을 진화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레바논 인들은 분노했고 산불 발생 불과 며칠 뒤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이라크의 경우 여름 최고 온도가 매년 최고치를 갱신 중이다. 2020년 여름은 역대 최고인 51.8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매일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유층들은 집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거나 비싼 민영 전기를 구매한다. 2019년 거리로 뛰쳐나온 이라크 시위대는 "집에서 더워서 죽으나 거리 시위에서 총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레바논과 이라크 모두 시위로 인해 총리가 퇴진했다. 하지만 2019년 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은 요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레바논인의 절반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이라크 청년 3분의 1이 실업자다. 지난해 10월 이라크에서는 점거시위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거리 행진이 전국적으로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끊임없이 낳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팬데믹은 저항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한국

그렇다면 아랍 민중의 저항은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2011년 '아랍의 봄'이 그랬듯이 아래로부터의 반란은 지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집트 혁명은 무바라크와 같은 오랜 친미 독재자를 몰아냈고, 이스라엘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리아의 혁명가들은 러시아군 폭격 속에서 아사드와 맞섰으며 이라크 시위대는 이란의 내정 간섭 중단을 요구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중국 견제로 중심을 옮겨갔지만, 중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군사 개입은 최소화하더라도 중동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아랍 지배자들과 이스라엘을 화해시켜 이란과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다. 최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수단, 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작업이 있었다.

미국의 이런 방향은 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이미 바이든은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옮긴 미국 대사관을 다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시대의 대외 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오바마아말로 이라크, 시리아를 공습하며 민간인을 살해한 장본인이다. 미국은 중동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개입할 것이고 지역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지배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한국 지배계급 또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중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얼마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사건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은 나뭇의 이해관계를 위해 중동 지배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바란다. 한국의 에너지, 건설, 방산 기업들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진출해 있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반제국주의 투쟁은 그렇기 때문에 아랍 민중의 저항과 연결돼 있다. 한국 군대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이란을 전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를 위협으로 몰아넣는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희생당하는 쪽은 한국으로 피난 온 예멘, 시리아 난민들과 같은 민중이기 때문이다.

2011년의 '아랍의 봄'과 2019년의 반란들을 촉발시킨 이 지역의 물질적 조건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경제 위기, 기후변화, 제국주의 경쟁, 팬데믹을 낳기 때문이다. 혁명이 부침을 겪는 곳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혁명의 무풍지대였던 새로운 지역들이 저항의 대열에 가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대규모 저항으로부터 배우고 영감을 얻고 연대하자.

'아랍의 봄' 10주년 온라인 기사들

▶ 반란의 튀니지, 그 10년

▶ 이집트 혁명 — 세계를 뒤흔들었던 18일

이집트 난민들의 목소리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최악의 나라입니다”

김어진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난민법 개악안은 2월 6일 이후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개악안은 난민 재신청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국경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퍼센트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 1퍼센트 미만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법무부 난민정책과의 ‘규제영향 분석서’는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개악안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한다. 보수 언론들이 정부의 난민 거부 입장에 박수를 보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까닭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생명도 중시하지 않는다. 외국인보호소 내 코로나 집단감염이 우려되지만 이렇다 할 방역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이주민 중에는 난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이집트 인권 침해 감시 단체(이집트인권네트워크 Egyptian Network for Human Rights)는 SNS에 한국의 이집트 난민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고통을 겪는다.



높아지는 국경, 나빠지는 난민 처우 2018년 8월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출신 난민들

“나는 내 두 딸과 기자 출신인 친구와 함께 2018년 3월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첫날부터 구금돼야 했어요. … 다음 날 공항 내 난민신청자 대기실로 옮겨졌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환기도 되지 않고 창문이 없어 햇빛도 볼 수 없었어요.

“약 10일 뒤에 공항에서 나와 … [영종도의 난민 센터에 수용됐지만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처우는 더 나쁘고 엄격했어요. 센터에서 나온 뒤에는 … [한국 정부에 의해 일하는 것도 막혔어요.”

또 다른 사례는 난민 심사의 문제들을 보여 준다.

“[2016년에] 이집트로 귀국하면 학대 당할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와 동영상을 제출했음에도 … 내 진술이 허위이고 내 아내가 체포된 날짜가 다른 날짜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나와 아내를 난민 인정이 거부됐습니다.

“우리는 이의신청을 하고 … 시위를 했어요. [출입국 당국한테서] 진지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의신청을 조사할 테니 시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 우리 요청은 다시 거부됐어요, 우리는 항소했고, 2019년 2월 18일 법원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자] 출입국 당국이 항

소했어요. …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자들의 서류를 조작하는 데 연루된 통역가들을 한국 정부가 기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출입국 당국이 난민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뿐인 인권과 포용

한 난민의 증언은 인권과 포용을 말해 온 문재인 정부가 난민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 준다.

“[출입국 당국은] 제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체포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증거 있느냐는 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지적이 일리있다.

“[이집트와 같은] 억압적인 정권들은 복잡하고 왜곡된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추적한다. 형사 사건들을 조작하는 지경이다. 한편, 그들은 잔학 행위나 테러 같은 비공식적 억압 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위협과 국가의 연관을 입증 불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 이후 난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난민들의 조건을 악용해서 최저임금과 산재 보상 등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고용주들도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생활 조건이 나빠지고 있어요. 난민 가족들은 여러 청구서와 임대료 지불이 밀리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이 큼니다.”

“취업을 했지만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먹을 것도 없어서 임신 7개월인 아내는 심한 빈혈에 시달려야 했어요.”

이집트인권네트워크는 난민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공장주에 의한 것이든 국가의 침묵에 의한 것이든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우파의 눈치를 보면서 난민에 대한 국경 통제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김지윤

1월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17개 의혹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 은폐 시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다. 해경 지휘부 구조 책임 것과 특조위 활동 방해 건만이 불구속 기소됐는데, 진작에 뒤편에 할 조처다. DVR(세월호 CCTV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은 도입이 예정된 특검에 인계하겠다는 처분을 보류했다.

오랫동안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박근혜의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법무부에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리자 ‘불가’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의 장기간 외압으로 김경일에 대한 기소가 늦어

졌다는 의혹도 있었다. 우병우의 혐의도 비슷하다. 이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검과 대검의 지휘 라인은 김경일을 기소한 뒤 일제히 좌전됐다.

특수단은 황교안과 우병우를 서면 조사만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위계 관계에 있는데도 “의견 교환”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특수단은 “대검의 보고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여지를 남겼다.

유가족 사찰이 문제 없다니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거나 협박에 사용되지 않았고,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김기춘, 남재준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특수단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지도 않았고(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당사자인 박근혜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사실들만 보더라도 유가족 사찰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2018년 국방부의 조사와 전 기무

사 참모장에 대한 재판에서 기무사가 60명 규모의 ‘세월호 관련 TF’를 꾸렸음이 확인됐다. 이 TF가 유가족을 사찰해 상부에 올린 보고가 627건에 이른다.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국내정보부서가 국정원 지휘부와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동향을 보고했고, 국정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규탄 기자회견 등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정원은 유가족을 ‘돈벌레’로 모욕하고,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다.

보안경찰들은 세월호 운동을 흠집내 정부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찰을 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 개인과 운동을 탄압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 기구들의 책임자인 대통령 박근혜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은 처벌돼야 마땅하다.

고 임경빈 군 구조 지연으로 인한 사망 의혹도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했다. 해경이 임 군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경은 원적 진료한 병원 측의 긴급

후송 요구에도 임 군을 곧바로 보내지 않았다. (사망 물증을 제시한 것도 아니므로) 생사가 불투명하다면 일단 빨리 병원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책임 문제에서는 특수단 결론의 설득력이 없다. 즉시 후송이 가능한 인근 헬기는 당시 해경정장과 서해해경정장 등 지휘부 의전에 쓰이고 있었다.

이 건은 혐의 성사 여부와 별개로 국가 기구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 의 위선

결국 이번 수사는 2014년 수사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이번에도 검찰, 국정원 등 핵심 국가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총돌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

2014년 부실 수사의 주범 이성윤(당시 목포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에 해당),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내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당시 해경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은 윤석열의 측근으로, 현재 수원지검장이자, 이성윤과 윤대진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하에서 일했었다.

윤석열이 임명한 특수단 단장 임관혁은 우병우 하에서 오랫동안 평검사로 일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선 실세 감찰 보고서(일명 ‘정윤희 문건’) 수사에서 문서 내용이 아니라 유출만을 문제 삼았었다.

이제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배신 목록 중 대표적인 하나가 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한다.

지난해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사참위 조사 대상에서 삭제시키는 사참위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얼마 뒤 법원은 살균제 기업 SK케미칼과 애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여당은 기업주들이 책임을 지게 하려고 입법 청원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누더기로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는 생명·안전 중시와 병행될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의 위선적 개혁에 기대는 것이 참사 방지와 진실 규명 등의 해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괴이한 특징 하나는 아마도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 시장은 마치 경제적 현실을 거스르는 능력이 있는 듯 보인다. 1990년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주식시장의 “비합리적 활황”을 불평했다.

이제 비합리적 활황은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는 치명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휩싸여 있고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대체로 그 결과로, 세계 경제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치솟았다. 3월 이래 세계적으로 74퍼센트나 올랐다. 저명한 투자 전략가 제러미 그랜섬은 올해 초 다음과 같이 썼다. “2009년 이후의 기나긴 강세 시장이 마침내 완전한 ‘역대급’ 거품으로 무르익었다.

“극단적으로 가치가 과대평가되고,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주식이 광적으로 발행되고, 투자자들이 고삐 풀린 투기 행태를 보이는 이번 사태는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며, [1720년] 영국 남해회사 거품, 1929년의 [대공황을 낳은] 거품, 2000년의 [IT] 거품에 버금갈 것이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거품이 왜 생기는가? 첫째 이유는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유지돼 온 방식에 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은 더뎠다. 이는 이윤율이 신자유주의 시대인 1997년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정점을 찍은 뒤 그 수준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10년경에 각국 정부들은 긴축으로 전환했다. 재정 정책, 즉 지출 확대를 경기를 자극하지 않은 것이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은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중앙은행이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양적완화란 국채와 기업 채권을 마구 사들여서 금융시장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정책들 덕에 기업들은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윤율이 낮은 탓에 새로운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많은 돈이 금융시장으로 갔다.

매입

기업들은 대규모 자산주 매입에 나섰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리면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고 최고 경영자들의 부를 불릴 수 있었다.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다

더 단기적인 요인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났다. 백신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이런 믿음은 선부른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이는 상품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 일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영향도 있다. 영국에서는 영국이 그나마 협상이라도 맺고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선

승리는 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인다.

영국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해 급증하는 공공 지출에 사실상 자금을 조달하는 구실을 했다.

영국 정부는 “길트”로 불리는 재무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렸다.[“길트”는 과거 영국 제국이 금박(gilt)을 입힌 채권을 발행한 것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그 가치가 안정된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의 분석에 의하면 이 채권을 구매한 것은 주로 영국 중앙은행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길트를 4500억 파운드(약 675조 원)어치 더 사들였다. 이것은 부채 상환 비용을 줄여서 막대한 정부 차입 정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확신한다.”

현재 바이든은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州)에서 상원 두석을 확보해 상·하원 모두 지배하게 된 덕에 바이든은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계획 또한 추가적인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재정 정책이 통화정책과 만날 수 있다.

부양책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주가 상승을 부추긴다. 이 추가적 지출이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도 있다는 과장된 우려 또한 주가 상승에 일조한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주식은 채권보다 더 매력적이 된다.

이렇듯 2007~2008년 경제 붕괴 후 10년이 넘었지만 세계 경제는 생명유지장치를 떼지 못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버티고 있다. 제러미 그랜섬은 경고한다. 이전 거품이 그랬듯이 “이번 거품은 머지않아 터질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8호 / 번역 이원웅

트럼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소셜미디어 기업은 우리 편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지당한 것을 계기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의한 계정 차단 조치가 좌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라 베이츠가 살펴본다.

2주 전,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정지당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다.

가장 처음으로 페이스북이 트럼프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시켰다.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난장판을 연출한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튿날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기한, 최소 2주간” 트럼프의 계정을 차단한다고 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했다고 했다.

그 후 며칠 새 유튜브, 아마존, 애플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소유한 사

이트에서도 연이어 트럼프의 게시 권한이 정지됐다.

난동

트럼프는 [1월 6일 시위 전에] 트위터에다 “미국을 구하라” 시위가 대선 “도둑질을 멈출 것”이라고 썼다. “1월 6일 워싱턴DC에서 큰 시위가 열린다. 참가하라, 격렬할 것이다!”

트럼프 계정 정지에 환호하는 정서는 이해할 만하지만, 이것이 남기는 선례가 무엇이라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뉴스를 발행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서 큰 구실을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인터넷으로 정보 유통을 지배자들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활동가들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의 모호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여기저기, 트럼프의 경우처럼 폭력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계정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이사 회실에 앉아 어떤 폭력이 정당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거대한 민간 기업들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차단하거나 키우는 분쟁 조정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해방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전투의 모든 역사에는 폭력적 충돌과 저항하라는 호소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저항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은 소셜미디어 차단이 가져올 결과를 신중하게 고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피케팅(파업 때 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것)이 경찰한테 공격받거나 반파시즘 시위대가 파시스트들한테 공격받을 때, 파업 참가자들과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들 또한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

지난여름 미국에서 벌어진 맹렬한 시위 이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활동가들의 계정을 차단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

기도 하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의사당에 난입한 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들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보해 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앞다퉈 시위 주동자들을 찾아냈고 FBI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있는 듯하다. FBI는 1월 6일 이후 “10만 건이 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만큼은 FBI가 우익 시위대를 겨냥해 소셜미디어의 힘을 사용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적으로 좌파를 공격할 때 이런 전술을 써먹었다.

영국 정부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이용해 무슬림을 표적 삼고 감옥으로 보내 왔다.

2011년에 페이스북에 폭동을 일으키자고 하는 글을 올린 두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릴랩(힙합의 한 장르) 영상들이 폭력단 간 싸움을 부추

긴다며 젊은 흑인들을 기소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증거

이런 영상들은 “공동범죄법”에 따라 피고인들을 연루시키는 증거로서 이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범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공동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일부 좌파는 트럼프가 온라인 연단에서 번드리로 쫓겨난 것을 무척 기뻐한다. 비록 트럼프가 여전히 기존의 방송 매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미디어 기업 경영자들이 우리 편이 될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단지 트럼프의 폭력 시위 선동만이 아니다. 우리의 미디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통제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나란히 존재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8 / 번역 강미영

문재인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원인을 호도하거나 미봉책이거나

전주현

이 글은 1월 18일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약한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최근 가해자 양모의 재판이 시작되고, 학대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하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세 번이나 양부모를 무혐의 처리해 사건을 종결시킨 점이다.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지만, 경찰을 향한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여론을 의식해 아동학대 예방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아동학대 대책이랍시고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입양 아 반품 제도'가 없어서 정인이가 죽은 것이냐는 분노에 찬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양모가 아이와 안 맞아서' 생긴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친부모가 저지르는 데서도 보듯, 입양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아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 책임을 피하고자 아동학대의 원인을 호도한 것이며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봉책만 내놓았다. "근본 대책"이라는 포장과 달리, 주로 피해 아동 실태 파악과 감시 체계 강화 등 사후 대응에 초점을 뒀다. 반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나 피해 아동 지원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에 매우 인색하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 규모가 작고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개선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위한 복지부의 2021년도 추가예산안 212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등 우파의 호들갑도 메스껍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뽀질닉 조치로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급급했다. 정작 필요한 아동 정책 예산은 삭감하기 일쑤였다. 현재 우파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할 뿐이다.



경찰과 정부는 아동학대 해결에 무능하다

아동학대는 사회 체제 문제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 발견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8년에는 약 2만 4천 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3만 건이 넘는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6년간 총 175명이고, 2019년에는 42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

이 많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주로 부모이고 은밀하게 벌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아동학대가 자본주의 사회에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동학대를 '괴물' 같은 개인의 기질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과 특히 가족제도의 구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13면을 보시오.)

그래서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물론 아동학대는 끔찍한 범죄이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꾸준히 강화됐지만, 아동학대가 줄지 않았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려면 아동학대를 낳는 사회적 요인들(불평등과 빈곤 등)에 맞선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필요한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효과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서 진행했는데, 살인적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400명을 충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아동학대 업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써부터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량이 논란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려면, 더 많은 전담 공무원을 당장 배치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경찰이 아동학대 문제를 진중하게 다루고 수사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학대받는 아동이 부모나 다른 양육자에게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린 아동들은 피해를 진술하기가

특히 어렵다. 의학 지식과 아동 심리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사팀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 아동 지원이 크게 늘어야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대책으로 분리 조치를 강화했다. 심각한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분리 조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분리된 아이들이 지낼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72곳으로 500여 명 정도 수용 가능한데, 이미 포화상태다. 정부가 13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한 해 3만 건임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 아동이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으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좋은 쉼터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피해 아동이 기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성인이 돼 자립하기까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데, 정착금 500만 원만 받고 직장도 집도 없이 맨몸으로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 한 달에 5명가량 자살하는 이유다.

한편, 분리 조치를 무조건 앞세워서는 안 된다. 경미한 학대나 빈곤에 의한 방임 등은 가족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과 심리상담·교육제공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계적 분리 조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적합한 피해 아동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학대가 발생한 가족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연구자들은 학대 가해자가 "가정 불화와 경제 문제, 정신질환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과거 학대 경험이 대물림되거나, 부부 간 폭력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가해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치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학대 대상이 될 수 있고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 넷째,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 아동의 약 25퍼센트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고, 학대 가해자의 30퍼센트는 무직이었다(복지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한 연구("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12)를 보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으로 불평등과 아동빈곤을 낮춘 국가에 견줘 불평등과 아동빈곤을 방지하는 국가에서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가 가난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간 빈곤에 시달리면 아동학대가 일어나기가 더 쉽다. 학대 가정이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을 되찾으려면 일자리와 양육 지

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아동을 포함한 대중의 복지를 대폭 확대하면 아동학대를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아동보호 관련 예산이 GDP 대비 0.2퍼센트로 OECD 평균의 7분의 1수준이다.

양육을 거의 부모가 짊어지게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없다.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고, 양육 부담이 커지면 부모가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쟁과 소외를 겪으며 좌절하고 뒤떨린 일부 부모가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면서 학대 행위로 발전한다.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외치는 정부에게 복지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고, 군사비를 대폭 줄여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차별이 아로새겨진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아동학대와 자본주의

정진희

1월 1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아동학대와 자본주의'에서 이 글을 처음 발표했다.

아동학대의 정의에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까지 들어간다.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쉽기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아동이 여러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동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지난해 6월 중순 유엔(UN)·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가 보고서를 냈는데, 전 세계 아동의 절반인 약 10억 명이 학대로 장애와 사망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2018~2019년 155개국 정책 전문가 1천명 가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해 작성됐다). 2017년에만 4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했다고 한다. 세계에서 아동의 처지가 가장 열악한 곳은 빈곤층 인구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런 나라에서 극심한 폭력과 학대를 겪는 아동이 많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

아동학대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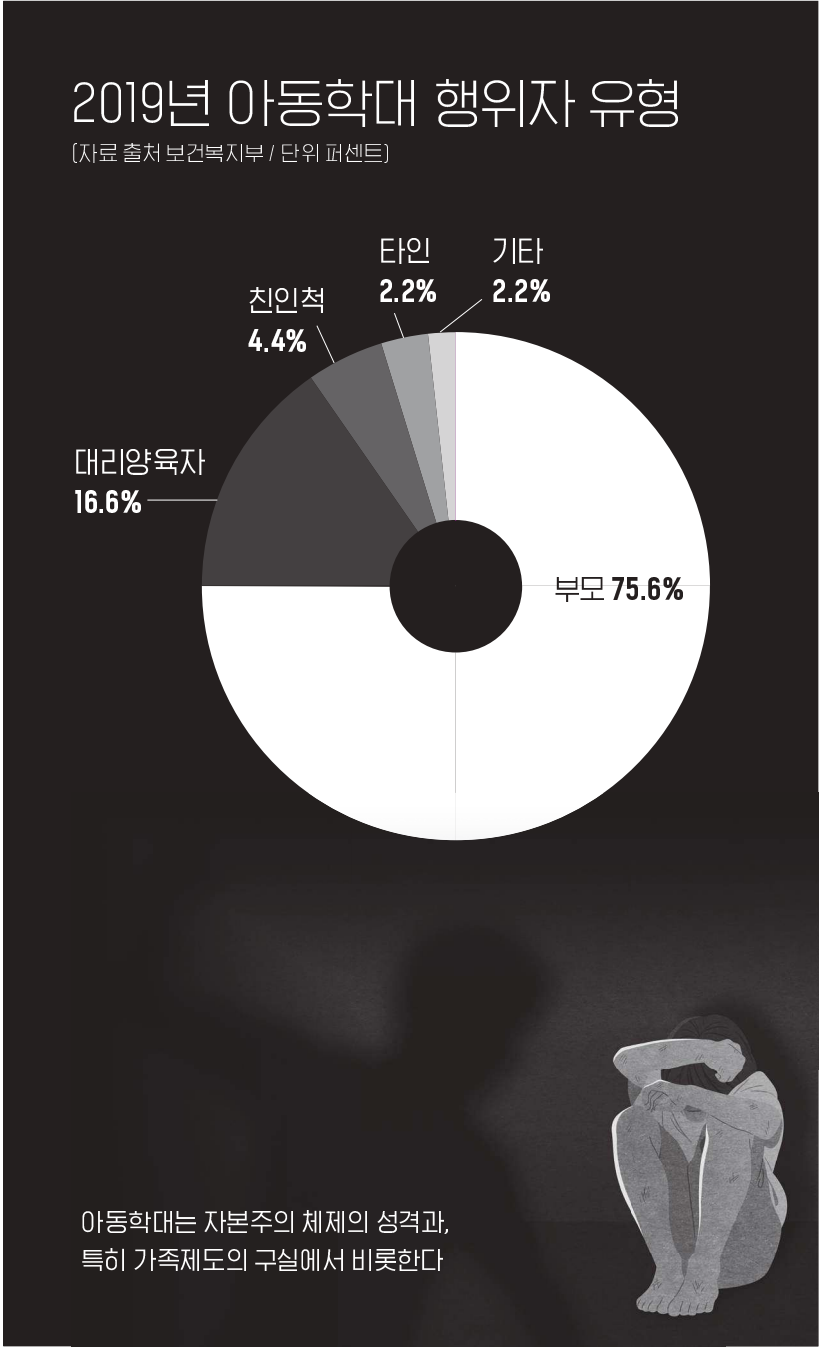
주류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는 가해자들의 잔인함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아동학대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들의 심리나 의식의 문제로 축소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가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동학대가 자본주의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의 노동을 착취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고 이윤이 우선되는 사회이다. 경찰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무시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이유다.

착취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외를 경험한다. 인간의 본성이 노동은 시장의 힘에 따라 사고팔리고 시장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삶과 경험에 모두 영향을 끼친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경쟁이 부추겨지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알пах해지고 사람들의 공감 능력은 크게 떨어지기 쉽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구조적이지만, 지배자들은 실패를 한낱 개인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좌절한 사람들은 흔히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이것은 종종 폭력으로 나타난다. 서구 학자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이 불평등의 영향을 다룬 책을 2010년에 발표했다[2012년 《평등이 답이다》(이후)로 번역돼 나왔다]. 그들은 국가별 비교 연구를 위해 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를 보면, 불안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심각한 질병이 모두 불평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폭력 범죄와 소득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살인율이 높고, 미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한 주에서 살인이 더 자주 발생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아동의 피해가 커진다. 나라별 아동학대 정의가 달라서 국가별 비교 연구는 어렵지만, 아동학대 사망률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것을 보면, 경제적 불평등과 아동학대의 긴밀한 관계가 나타난다. OECD 국가의 아동학대 사망률을 분석한 연구[1]를 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아동 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다. 2000년대 중엽 ‘고의적 아동사망률’(학대로 인한 사망과 살해)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2005년)과 멕시코(2007년)이다. 한국(2006년)은 29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가족제도의 구실

아동학대는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고, 특히 가족제도가 체제에서 하는 구실이 아동학대를 낳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이다. 한국의 통계(2019년)에서 가해자 대부분(75.6퍼센트)은 부모이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는 부모가 많지만 형제자매, 조부모, 친척도 적잖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곳은 가족이고, 양육은 개별 가정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고 가족은 흔히 위계적으로 구성된다. 남자가 가장 중요하고, 여자는 그 다음이고 아이는 최하위 취급을 받는다. 가족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은 현재의 노동인구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인구를 낳고 기르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험난한 세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책임 따위를 설교한다. 이를 통해 지배자들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개별 가정



에 떠넘기고, 보수적 가치관을 노동계급에 심어 주고자 한다. 가족은 매우 모순적인 제도이다. 사람들은 가족을 통해 위안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지독한 불행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든,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적 가족 상(이미지)을 장려한다. 그러나 대다수 가족은 그런 이상대로 살 수가 없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의 삶은 계급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부유한 가정과 노동계급 가족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다. 냉혹한 이윤과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관계 밖에서 헌신적인 돌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성별 규범을 받아들이며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자 애쓰는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의 이상에 집착하는 것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결과라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겪는 착취와 소외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냉혹한 현실은 흔히 그런 기대를 깨뜨린다. 가족은 결코 바깥 세상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오히려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족 내에 영향을 끼쳐 가족관계에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곤 한다. 만약 가족이 '험난한 세상의 안식처'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만

이 폭발할 수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가까이 있는 약자에게 분풀이를 해낸다. 학대당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나 다른 양육자에게서 학대당하는 이유다. 신체적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은 드물게 일어난다. 아동학대 신고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가장 흔한 형태가 방임이다. 아동학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빈곤이다. 빈곤은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늘 돈에 쫓돌리고 형편없는 주택에 복작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멸시받고 좌절을 겪으면 일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다. 부모 자신이 어릴 때 아동학대를 겪으면, 커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릴 때 학대를 받으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에 빠지기 쉽고, 일부는 성인이 돼서 자기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연구가 많다.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유치원·아동 복지시설·교회 등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불평등과 차별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제도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복지기관 등 자본주의에서 아동을 돌보는 기관은 모두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아동은 대개 통제의 대상이 된다.

진정한 해결책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가해자 처벌에 집중한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 처벌이나 신고 강화 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일 뿐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앞서 봤듯이,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은 고의적 아동사망률이 2005년 OECD 1위다.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미국은 온갖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지배계급은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지만 그럴 수 없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란한 말잔치를 할 뿐 아동 복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다른 경제·사회 정책과 분리돼서 이뤄진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서민층 아동의 삶은 자본주의 경제 상황과 더 폭넓은 국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업과 빈곤, 열악한 주택, 높은 양육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지배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배자들은 아동학대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아동의 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배자들은 불황이 깊어지자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돈을 퍼 주면서 노동계급과 서민층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다. 지배자들은 개혁을 제공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복지를 줄이려 들고 있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착취를 강화하며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 등 각종 차별도 계속 부추긴다. 해고, 임금과 복지예산 삭감 등은 대중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며 많은 가정을 붕괴 위기에 빠뜨린다. 노동계급과 서민층 아동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노동계급이 일 자리, 임금 인상, 복지 확충 등을 위해 집단적으로 투쟁하는 게 중요하다. 여성·성소수자·이주민 등 차별에 맞선 투쟁도 중요하다. 집단적 투쟁은 대중이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자신감과 의식을 높이는 길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서 아동학대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노동계급의 투쟁이 심화돼 혁명으로 발전한다면 자본주의를 제거하고 대중의 필요가 중심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양육이 개별 가정이나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고 노동계급이 사회 전반을 통제할 때 아동학대도 뿌리 뽑을 수 있다. 우리는 노동계급의 삶을 악화시키는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면서 아동학대의 근원인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1] 김선숙·유민상 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제16권 제4호.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방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처럼,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일터에 나간 부모가 장시간 집을 비우면서 아동의 위생 상태나 식생활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강 및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는 아동의 교우관계 악화로 작용하거나, 발달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아동학대는 분명 부모의 잘못이 있지만, 엄청 폭력적이고 악마 같은 부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양육과 돌봄이 오롯이 개별 가정에 맡겨져 있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감한다.

한편, 교사가 아동학대를 보아도 신고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1월 11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교사



공적 보육·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6일 초등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반대, 공적돌봄 강화, 상시전일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40퍼센트가 아동학대를 목격했지만 이 중 19퍼센트만이 신고한 경험이 있다. 60퍼센트는 신고를 망설인 경험이 있었다.

교사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신고 뒤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33.8퍼센트)였다. 즉, 아동학대를 신고해도 분리 조치가 불가피할 때조차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분리되더라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지속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 의무만을 강조할 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내놓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신고한 교사만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원망을 듣거나, 심지어 가해 부모한테서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교사들은 신고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몇 년 전에 지체장애 아동을 폭력적으로 학대하는 부모가 있었다. 상담교사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부모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 가 보니 황당하게도 피해 아동은 학대 부모가 데려가고 없었다. 담당 경찰도 이 아동을 보호할 곳이 근처에 없으니, 부모더러 '다짐 서약서' 같은 것을 쓰고 아동을 데려가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증팔구 학대가 재발한다. 이러니 무조건 신고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집안 점검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맡았던 한 학생의 경우는 상담이 8회 정도로 끝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 한 담당자가 지역의 수많은 위기 아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꽤 관심을 받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8회가량 상담과 점검 조치로 가정 환경이나 부모와 아동의 생활 패턴이 쉽게 변할 수는 없기에 방임은 유지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후속 대책을 세우고,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전문가들을 대폭 투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아동보호기관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동 보호 시설을 늘리고, 정신적 고통도 치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예산 삭감

그런데 올해 아동학대 추가 신청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될 때조차 문재인 정부는 이를 나몰라라 했던 것이다! 평범한 아이들의 삶이 문재인 정부와 지배계급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부모의 잘못을 넘어 국가의 방임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재정을 대폭 투입해 공적 보육·돌봄을 확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복지를 확대하려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돌봄전담사들처럼, 복지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인력 총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이현주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들과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업 규정'을 보면, 보육교사 1명은 만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까지 돌보도록 돼 있다. 만 4·5세의 경우 교사 1명당 20명이다.

사고 당시 담임교사 한 명이 아동 19명을 데리고 야외활동 중이었다고 한다.

비통한 마음이었을 유가족은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

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며 이런 현실이 개선돼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규 보육교사를 총원해 교사 당 아동 수를 줄이라는 것은 그간 보육노동자, 학부모 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요구다. 보육교사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한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제대로 쉴 수도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아이를 돌보고 난 뒤에는 행정·상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해서 시간의 노동을 하기 일쑤다.

더욱이 사고가 난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보육 환경이 나은 국공립이었는데, 어린이집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사설 어린이집 상황은 더 나쁘다.

아동 사망 사건이 비극적으로 드러내듯이, 보육교사 수와 노동조건은 아동의 안전과 돌봄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보육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유가족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한 달 만에

20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보육 환경이 근본에서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기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에 나가야 하는 많은 노동계급 부모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돌보던 아동의 죽음은 보육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긴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 1월 12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정규 보육교사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 교사를 우선 배치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보조 교사 배치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조 교사 배치가 확대돼 왔지만, 하루 4시간 시간제 인데다 보조 교사 업무 규정이 불명확해 원장들이 자신의 업무 보조로 활용하거나 담임 교사의 휴게시간 등에 대체 업무를 맡기는 식이었다. 아이 돌봄 업무를 분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랜 시간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해야 효과적인 영유아 돌봄에 잠시 머무는 시간제 노동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관련 기사 본지 284호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보조교사 배치가 아니라 **정규 보육교사를 대폭 총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교사 개개인의 역량과 안전 의식을 탓했다. 고약하게도 보육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교사 의식 탓하는 것도 가소롭다. 정부 수장이 아동학대 대책으로 '입양 아동 변경'을 거론한 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저열한 의식을 보여 준다.

정부의 이번 답변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 준 '개혁'의 전형을 보여 준다. 말만 그럴듯 하게 할 뿐, 실질적 개혁책을 내놓지는 않고 노동계급 내(부모들과 보육 교사들 사이에) 갈등만 조장한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한국 정부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돼 온

상황에서 보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시장 원리를 이용해 그 부담을 대부분 개별 가정에 떠넘겨 왔다. 보육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됐다. 이는 아동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돌봄의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츄츄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언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육 예산을 삭감했다.(관련 기사 본지 349호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이러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 “포용국가”를 운운하니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보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정규직 보육교사를 대폭 총원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교사 당 아동 수 줄이기로 보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국방비를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아직인데, 바이오 산업 경쟁력부터 챙기는 문재인 정부

장호중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참 역부족이다.

미국에서 확진자 수는 2416만 명,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다. 특히 확진자 중 60퍼센트 이상이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자문단 일원인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6~12주 뒤 팬데믹과 관련해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상황을 볼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에서 발견된 서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빨라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14일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변이의 국제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타격을 정면으로 받은 영국에서는 매일 1500여 명이 사망하며 지난해 봄 유행 당시의 사망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입국 절차가 강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각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기에 경제를 재가동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오히려 방역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백신 생산·보급 속도는 미미하게나마 나아지고 있다. 운이 좋다면 두 달가량 뒤에는 증상뿐 아니라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백신도 출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백신(노바백스 제품)은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과 제조 방법이 비슷해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앞으로 최소한 몇 달 동안



왼쪽부터 박용만(두산) 이재용(삼성), 최태원(SK), 문재인, 구광모(LG), 서정진(셀트리온)

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백신 보급에서 후순위로 밀린 남반구의 빈국들은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기에는 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등이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비율이 59.9퍼센트로, ‘빨리 맞겠다’ 37.8퍼센트보다 많았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당시처럼 백신 접종 속도도 느려질 수 있다.

변이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들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했다. 물론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계속 방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듯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자와 임대료 등 각종 부채 상환을 동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다. 그렇게 해야 방역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재정 지출을 아끼려고 거리두기만 완화하는 것은 평범한 사

람들에게 생활고와 방역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조치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분위기만 띄우고는 품을 들고 있다. 정부 여당은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 압박해서 지급(혹은 발표)하려는 듯하다. 아직 팬데믹이 한창이라 지금 지급하면 이후에 추가 지출을 해야 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앞서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가 정부 여당의 압박에 지급 시기를 미룬 것은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에 큰 기대를 걸며 ‘계엄체인지’ 운운해 왔는데, 최근 식약처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며 발표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듯하다. 발표 직후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항체치료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약이다. 이 항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항체치료제는 가격이 매우 비싸 모든 확진자에게 투여하기는 어렵고,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큰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워 미국에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큰 효용이 없다는 분위기다. 거대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사가 임상 3상을 앞두고 개발을 중단한 이유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내 셀트리온을 띄워 준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실 문재인은 임기 내내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등 재벌 총수들을 불러 환담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에 늘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도 불러 특별 대우했다. 서정진은 줄곧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바이오 산업은 제약·의료기기 산업과 이와 연관된 정보통신 산업 등을 포괄하는데 핵심은 제약, 그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기존의 합성 의약품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으로 만들어 낸 물질을 사용한다. 백신, 인슐린, 성장호르몬, 면역항암제 등이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이다.

기존 제약산업의 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둔화된 반면, 바이오 의약품은 2000년대 들어 급성장했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이나 난치성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다. 2010년 세계 의약품 시장의 18퍼센트를 차지하던 바이오 의약품은 2018년 28퍼센트까지 늘어났다. 2017년에는 전 세계 매출 상위 10위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이 8개를 차지하기도 했다.

희귀 질환을 위한 약이 이토록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니 약값이 얼마나 비쌀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50퍼센트에 육박한다. 자본가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들이 바이오 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배경이다.

셀트리온은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내 주자다. 처음에는 해외 거대 제약기업의 약품을 위탁생산하다가 최근에는 복제약(바이오 시밀러)을 만들어 유럽, 미국 등에서 사용승인을 받기도 했다. 유명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SK 바이오팜 등 재벌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셀트리온은 주가가 크게 올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난해 1월 16만 원가량 하던 주가가 꾸준히 올라 올해 초 38만 원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코로나 항체치료제는 그 효용성을 의심받고 있고 백신 개발에는 (아마도 기술력이 뒤쳐져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항체치료제를 띄워주고 백신 자주화를 천명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도 아까워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으니 코로나 19 대응보다 젓밥(기업 이윤)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 준다.

파업 앞둔 프랑스 보건 노동자들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일보전진입니다”

찰리 킴버

1월 21일 프랑스 보건 노동조합들과 환자 단체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하루 파업과 시위를 벌인다.

파업 조직자들은 “환자들이 직면한 문제들뿐 아니라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규탄한다”고 말한다.

조직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건 인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인력·병상 부족에 치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시간 10퍼센트 단축, 인

력 10퍼센트 증원, 임금 10퍼센트 인상, 훈련 시간 10퍼센트 연장을 요구한다.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임금 인상에 만족하지 않고 제기하는 요구다.

이번 투쟁은 [얼마 전] 보건 노동자들이 파업과 점거로 거둔 눈부신 승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월 11일, 툴루즈대학병원의 소아과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은 갈수록 절망적으로 악화되는 조건과 극심한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동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응급실만이 제 기능을 했다.

그들은 최근 병원 측이 간호사 12명을 총원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초과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요구한 것에 항의했다.

점거 파업 24시간 만에 노동자들은 요구 대부분을 쟁취했다. 간호사 8명과 직원들이 새로 채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초과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초과근무는 자원자에 한할 것이다.

한 점거 참가자는 지역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일보전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돌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 와중에 일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예’라고 하라고 압박지를 때에도 ‘아니오’라고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 수준의 승리가 필요하다.

에마누엘 마크롱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이 한창인데도 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랑스 전역의 중환자실 수식 곳이 향후 4년 내에 폐쇄될 예정이다. 또, 보건 예산이 약 40억 유로[약 5조 2500억 원] 삭감될 예정이다.

파업 조직을 조력하는 응급 의료원 단체 ‘응급실간협의회’는 이번 주에 발표한 예리한 논평에서 영국과 같은 운명을 피해야 한다고 파업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영국은 의료 체계 민영화·효율화의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영국 공공 병원들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21일의 행동은 의료 체계와 보건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더 강력한 운동을 시작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8호 / 번역 유나연



파업 돌입 태세로 투지 보여 주는 택배 노동자들

박설·신정환

전국택배노조가 설 명절을 앞둔 데 목에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그전에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택배사를 설득에 나섰다.

택배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노동자에게 무임금으로 떠넘겨 온 분류 작업에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1월 20일 현재 정부는 분류 작업을 사측 책임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 대신 택배요금 인상 등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직 불확실하긴 해도, 택배 인력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합의안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상컨대,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 문제에서 노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을 듯하다. (택배사들이 인력 투입 비용을 (다수는 노동자·서민인)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등은 우려된다.)

이와 별도로, 1월 20일 정부는 일감이 몰릴 설 연휴 기간에 택배 분류·상

하차 인력 6000명을 투입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과 한 약속조차 어겨 가며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를 방치해 온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은 택배사들과 정부의 약속 파기에 분통을 터뜨리며 항의에 나섰다.

마침 정세는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당장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30퍼센트대까지 떨어져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경제 위기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노동계급 대중의 불만은 쌓여 있다. 문재인이 내세운 검찰개혁은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고 꺼내 든 것이었음이 드러나 신뢰를 잃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집값·전셋값 상승, 여권의 자중지란을 부른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란 등도 실망을 자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탈하는 민심

을 붙잡으려고 최근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에 선을 긋고 개혁 시늉이라도 해야 했다.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이런 정세를 이용해 싸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노동자들의 불만

노조가 택배 배송 물량이 몰리는 설 명절 대목을 파업 시점으로 잡은 것도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만과 투지를 드러내 왔다.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요구를 지지해 주는 만큼,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지회장들은 20일부터 시작된 파업 찬반투표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누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 6일, 72시간가량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노동자 16명이 과로



살인적 노동조건에 맞서 일어나는 택배 노동자들 지난 10월 파업으로 승리한 롯데택배 노동자들

로 사망했다.

노동강도도 무척 센데, 근무시간에는 조금도 쉴 수 없고 끼니도 거르기가 다 반사다. 노동시간의 약 44퍼센트를 차지하는 분류 작업은 배송도 시작하기 전에 진을 빼놓는데, 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급 대중의 정서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됐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요구도 지지를 얻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스스로를 결속시키며 투쟁과 조직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생애 첫 파업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번 투쟁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

해외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

과로, 저임금, 코로나19 위험 노출 ...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양효영

과로에 시달린 택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택배 산업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DHL, FedEx(페덱스), UPS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DHL의 2020년 3분기(7~9월) 영업이익은 그 전 해 동기 대비 65퍼센트 늘어나 7억 5000만 유로(약 1조 210억 원)를 기록했다. 페덱스의 2020년 2분기 영업이익은 165퍼센트 증가해 15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로 치솟았다.

미국 아마존 등 물류업체들도 커다란 이익을 봤다.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해 8월 자산 가치가 2000억 달

러(약 239조 5000억 원)를 돌파했다.

택배 업체들은 이윤을 쏙어 담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노동자들은 급격히 높아진 노동강도와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의 좌파 월간지 <레이버 노츠>는 미국 우편 노동자와 UPS 노동자들이 한 달 내내 거의 쉬는 날 없이 12~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태를 보도했다. 테네시주(州) 녹스빌의 한 노동자는 팬데믹 이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 됐고 33일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州) 시애틀에서 일하는 UPS 배송원은 CNN에 말했다. “주 6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 나갈 때 아이들은 자고 있어요, 집에 돌아올 때도 대부분 자고 있죠. 집에 오면 저도 죽을 만큼 피곤해요.”

아마존은 수많은 하청업체에 배송을

위탁해 비용을 줄이려 한다. 배송 노동자들은 아마존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입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거나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위장 자영업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장시간 과로에,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대체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돈방석, 노동자는 푼돈

한 아마존 하청 배송 노동자는 <바이스>지에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착취당하고 기만당한다고 느껴요. 저들은 이 위기를 이용해 돈방석에 앉는데, 막대한 일을 하는 우리에게는 푼돈만 줍니다.”

당연히 식사할 시간도 없이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LA 지역의 한 여성 배송원은 할당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료 중 누구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자들은 물병에 소변을 볼 수 있지

만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몇 시간 동안이나 소변을 참고 있어요. 이걸 너무 심하다 싶어서 매니저에게 점심 시간 때 일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처지는 적은 인력으로 과중한 배송 물량을 소화하느라 일하는 중에 컵라면과 초코파이로 끼니를 때우는 한국 노동자들과 꼭 닮았다. (관련 기사 본지 345호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예요”’)

코로나19 동안 방역 조치를 지키라는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도 계속돼 왔다.

팬데믹 초기, 택배 업체들은 방역 용품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배송에 투입하려 했다. 지난 4월, 한 UPS 기사가 사측의 안이한 방역 조치를 폭로했다가 해고당하자 동료 노동자들이 항의해 복직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 달 미네소타주에서도 아마존 사측의

부실한 방역 조치에 우려를 제기하며 출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당한 노동자가 동료들의 파업 끝에 복직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산발적으로 벌어져 왔다.

홍콩에 있는 중국 노동운동 지원 단체인 중국노동회보(CLB)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이 34건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벌어졌다.

중국 택배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지만 한 달에 버는 돈은 평균 한화 80만 원에도 못 미친다. 택배 노동자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업체들이 매년 수수료 단가를 낮춰왔기 때문이다.

한국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런 세계적 투쟁의 일부다.